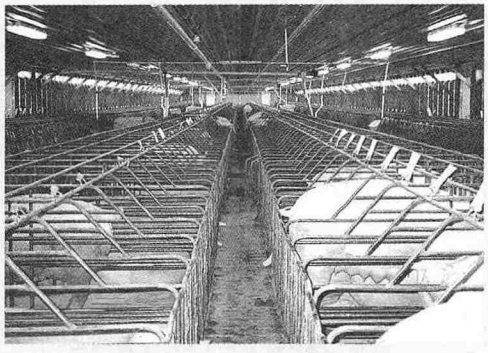
생산비 이하 돈가 하락 대비 안전장치 필요

양돈협, '돼지생산안정제' 도입(안) 농림부에 제출



한 · 미 FTA 타결과 한 · EU FTA 추진, 사료 값 폭등 등으로 양돈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돈업이 국민 식량산업으로서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돼지 생산안정제와 폐업보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양돈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양돈산업은 현재 FTA는 물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로 인하여 돈가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사료 값 및 가축분뇨 처리비용 인상, 소모성질환 발생 등으로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돈산업이 식량산업으로서 자급률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돼지생산안정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5차 이사회를 통해 돼지의 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대책이 너무 취약하다고 판단, 돼지생산 안정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지난 11월 8일 농림부에 돼지 생산안정제 도입(안)을 제출했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2006년도 돼지의 두당 생산비는 174,000원이나 2007년도에는 사료비 가격 상승, 제비용 증가로 인해 두당 생산비가 210,000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돼지의 두당 평균 산지가격이 210,000원 이하 하락시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와 관련 전 양돈농가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돼지생산 안정제 계약을 원하는 농장에 한해 연간 출하두수별로 계약금을 예치하고 산지가격이 생산비(210,000원) 이하로 하락한 시기에 출하한 두수에 생산비와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다.

이번에 제출한 돼지생산 안정제가 양돈농가에 시행될 경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돈육 자급률 개선과 함께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와 함께 FTA 체결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에 대한 폐업 및 전업 지원을 통하여 폐업희망 농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인수합병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폐업을 위한 농장 판매 시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과 지원을 강화하는 폐업보상제 도입도 요청했다. 양돈